

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표준안 배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과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조례 표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올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3곳의 지자체는 계획이 구체화되는 금년 말부터 본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본 조례안이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주요한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조례 표준안은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민·관 협력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용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및 용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규제완화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본 조례 표준안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과 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거쳐 확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2014.9.2.

02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제로에너지빌딩의 공사비 증가에 대한 문제를 건축 기준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 안건의 핵심 내용은 첫째,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저층·고층·타운형 3가지 맞춤형 사업모형을 마련한다. 둘째,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한 상한의 15/100를 완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통하여 세제 혜택과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신재생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선도할 뜻도 밝혔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4.7.17.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예고하였다. 해당 내용은 협의 및 심사를 거쳐 금년 11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공동주택(500가구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집회장과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최근 건축물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끄럼·

끼임·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실내건축 제도와 기준 의무화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공작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 시노후 철탑 등의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잦았다. 따라서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기시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하여 부과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4.8.19.

신진건축사 발굴 · 육성정책 활성화

해외의 건축정책을 살펴보면, 신진건축가 발굴과 육성 차원에서 장학제도를 마련하거나 유로판(Europan)과 같은 국제 건축설계경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년 5월) 수립을 계기로 신진건축사 육성 방안을 세부 정책과제로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이들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확정

국토교통부는 신진건축사들이 공공 설계시장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여 왔다. 신진건축사 아이디어 공모는 신진건축사에게 다양한 공공사업 참여의 물꼬를 터줌과 동시에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신진건축사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국토부는 사업 참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7월 초에 개념도 및 이미지 등을 담은 A3용지 5쪽 이내의 제출물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계획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평가하고 당선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당선자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권을 부여하는 부산시 금정구청의 '웅벽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공모에는 남욱재

건축사(이숨 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되었다. 웅벽환경개선의 현실성을 염두에 두고 5가지로 구분한 디자인이 우수하였으며, 시공성과 유지·관리적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광역시 '동명초 효평분교 리모델링 및 관광자원화' 공모에는 전병헌 건축사(더사이트 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되었다. 신소재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접목한 저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2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며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와 신진건축사 대상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통하여 신진건축사 발굴 ·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4.7.11.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자 선정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은 창의력과 기술력 등 설계자의 역량을 중시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력부족 등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진건축사들에게 설계능력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설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건축제전이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며 올해로 2회째 시행되고 있다.

이번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은 지난 5월에 공고되

2014 생활문화센터 국고지원사업 최종 선정

어 총 41명의 신진들이 지원하였으며,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8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신진건축사 대상의 심사(위원장 인익식)는 대표 설계 작품의 완성도, 건축사로서의 창조적 역량 및 건축주·시공자와의 소통능력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심사평에 따르면, 대상 수상자인 김현진 건축사(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는 설계는 물론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노력과 탁월한 세부디자인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윤태권 건축사(엔진포스 건축사사무소)와 노영자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엘아이엠)는 설계 작품에서 사용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신진다운 다양한 시도 등이 돋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수상자들을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다방면으로 실질적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4.8.19.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민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인 생활문화센터(구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2014년 국고지원사업으로 12개 광역 지자체의 31개 시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리모델링 사업비(97억 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입지와 규모·기능에 따라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되는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유휴공간과 기존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시설(동아리방, 다목적홀 등)과 특성화시설(댄스연습실, 공작소, 영상미디어실, 작은영화관, 생활체육공간, 문화카페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의 표현과 소통의 문화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의 생활 의제를 담은 프로그램과 주민운영위원회,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2014년 최종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된 생활문화센터는 그동안 도시 발전, 생활방식, 정주 인구의 변화 등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지역의 애물단지로 여겨지던 목욕탕·폐교·모텔·주민센터·승마장 등의 유휴시설을, 해당 시설이 갖고 있는 시·공간적 의미를 살리며 친근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조성될 예정이다. 유휴시설의 재활용 방식 외에도 시설 노후와 이용자 감소로 그 기능이 쇠퇴한 기존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기타 전시시설 등 기존 문화시설의 일부 공간을 생활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2014.6.30.

경기도, 서울시 등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책 마련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뉴타운 사업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소규모 정비사업이 도입되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국비지원을 통해 맞춤형 정비사업 가속도

경기도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7월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수원 매산, 성남 단대, 남양주 군장, 오산 오외장터 등 도내 4개 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8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다.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활력 증진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30%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보다 국비 지원율이 높아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선정된 4개 지구는 사업비로 도로·공용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회관·경로당·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데

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해 계획을 우선 수립한 것이 정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경기도 도시기획과 주거정비팀 2014.7.2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서울시는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설립·용자지원 등 공공관리제도 적용 △미분양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다.

공공지원책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기존 조합 운영자금 용자지원에서 건축공사비도 전체 4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2% 저리로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건립된 주택 중 미분양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가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미분양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 계획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비, 추정분담금을 산정·제공해 주민들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2014.7.17

부산시, 걷고 싶은 보행친화도시 만들기 추진

부산시는 사람 중심의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하고자 2014년을 '보행친화도시 부산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보행환경개선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시는 이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시범사업을 선정하였다.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보행친화도시 부산비전 수립, 보행환경개선 지구사업 중앙공모,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시범운영 등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행환경개선 지구시범사업은 지난 7월 보행환경개선자문단(9명)에서 심의한 결과 북구 젊음의 거리, 수영구 예술의 거리가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매년 2곳 이상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보행전용거리(차 없는 거리) 시범 추진에 따라 주말에는 시민공원과 서면 주변 등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은 거리를 대상으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거리를 운영(1회 이상 3개월간)한다. 또 시범운영 기간 중 성과를 분석해 전 구·군에 지역특성에 맞게 유형별 보행거리조성을 추진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 교통운영과 2014.7.10.

충남 서북부지역 '난개발 방지 TF팀' 가동

충남도는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도내 서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 TF팀을 가동하고, 개발과 보존이 함께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서북부지역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해 개발압력에 따른 공장, 주거단지 개발 등이 급속하게 진행 중으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더욱이 단기간 집중 개발로 인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토지의 비효율적 공급 등 각종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도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해당 시와 협력하여 TF팀을 구성, 중장기적인 난개발 방지 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계획에는 소규모 개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성과 경관성 검토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과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도는 효과적인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도·시 합동 TF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2014.8.6.